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년 12월 11일(수) 11:00
배포일시	2024년 12월 10일(화) 17:3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담당자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 (044-550-4158, cnam@kdi.re.kr)

2024 KDI 컨퍼런스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 일 시: 12월 11일(수) 09:30 ~ 16:30
- 장 소: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5F)

- KDI는 12월 11일 서울 JW메리어트 그랜드볼룸에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2024 KDI 컨퍼런스를 개최
 -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 성장률 둔화, 인구 고령화, 경제 성숙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
-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라는 틀에서 주요 구조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힘.

-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의 역동성과 응집력을 되살린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며, "오늘 컨퍼런스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 [기조 발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에서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과 경제구조의 효율성인 '총요소생산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
 - 경제성장 동력을 제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2) 창조적 혁신의 제고, 3) 견고한 사회 자본 확충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개혁방안을 제시
- [세션 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에서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은 잘 설계된 규제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사회 변화에 뒤처져 생산성 향상을 막는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개선과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전문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 개선과 더불어 획일적인 규제 보다는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
-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재편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고용보호 조정,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이중구조 완화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고용 계약부터 보호 수준 및 조건을 변경해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을 제안
-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경직적 노사관계로 인한 잦은 파업, 임금체계의 합리적 변경 저해 등의 문제가 있고,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은 노동 약자 보호가 취약한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고 분석

-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을 통한 환경 변화와 노조와 사용자의 대등성 확보를 위한 전향적 제도 개선, 노조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취약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김민호 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보조금 지급 위주의 보호 및 육성 정책에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스케일업' 정책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디지털 AI 전환에 대비하는 기업의 성장을 유인하되 상향식 맞춤형 모델로 전환하고 민간 참여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해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기업 지원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고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개선해 증거 기반의 성과 중심 기업지원 정책을 안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세션 2 창조적 혁신 제고]에서 김희삼 GIST 교수는 교육이 사회 이동성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상태라고 설명
 -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조기 개입이 중요하며 유보통합 및 돌봄 교육 확대, 초등학교의 영어 및 특기적성교육 확대, 기초학력 보장 및 중등 교육의 질 제고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
-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국가적 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 관점에서 중등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 충돌이나 획일적 시스템 적용 등의 문제로 학교 교육 혁신은 답보 상태라고 진단
 - 특히, 중등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의 단계적 자율화와 더불어 교장임용제도 개선 및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R&D 효율화'에 대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술 혁신 강국으로 GDP 대비 국가 R&D 투자와 R&D 인력 등 투입 측면에서 세계 상위권 수준이라 평가

- 이러한 투입에 걸맞게 양질의 경제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테마섹(R&D PPP)을 추진하고, 공공연구시스템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혁신해야한다고 주장
- [세션 3: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에서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역 균형 제도는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해 지역 간 경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경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힘.
 - 차등공동법인세 도입과 포괄보조금제 강화, 토지구제권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사익편취 행위 규율 개선과 혁신 제고 방안으로 공적 규율보다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 규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증권 관련 집단소송 실효성 제고, 공시제도의 효과성 개선과 같은 제도 정비로 자발적 규율 참여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 거래가 거래 의존도 심화와 홀드업 문제로 인한 협상력 격차 속에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
 - 하도급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하도급 법률 조항의 예시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
- ❖ **첨부 1. 세부 일정**
-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 ❖ **별 첨. 개회식 현장 사진(12월 11일(수) 10:30 배포 예정)**

❖ 첨부 1.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0:00 ~ 10:35	<p>개 회 식</p> <p>개 회 사 조동철 KDI 원장 축 사 한덕수 국무총리</p> <p>기조발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p>
10:45 ~ 12:25	<p>세 션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p> <p>발 표① 규제혁신 전략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p> <p>발 표② 노동시장 개혁 김민섭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p> <p>발 표③ 노사관계 선진화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p>발 표④ 기업지원 합리화 김민호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p> <p>좌 장 김용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토 론 강창희 중앙대학교 교수 오지윤 명지대 교수</p>
13:25 ~ 14:50	<p>세 션2. 창조적 혁신 제고</p> <p>발 표① 사회 이동성 강화 김희삼 GIST 교수</p> <p>발 표② 중등교육의 자율화 김이경 중앙대학교 대학원장</p> <p>발 표③ 국가 R&D 효율화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p> <p>좌 장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 토 론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정유한 단국대학교 교수</p>
15:05 ~ 16:30	<p>세 션3.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p> <p>발 표① 지역균형 발전방안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p> <p>발 표② 대기업규율 합리화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p> <p>발 표③ 기업 간 거래 선진화 이진국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p> <p>좌 장 조성욱 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윤경수 가천대학교 교수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p>

※ 11:45~12:25 조동철 KDI 원장 기자단 인터뷰 진행 예정(살롱 3번룸, 3F)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기조 발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

- 우리나라는 1인당 GDP 3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경제성장 동력은 빠르게 하락
 - “생산요소 투입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구조의 효율성인 총요소생산성 (TFP)마저 빠르게 하락
 -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 중심으로 노동생산성 역시 매우 낮은 상황
- 이러한 생산성 저하는 1) 생산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2) 창조적 혁신의 둔화, 3) 미약한 사회자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생산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경쟁 등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경직성과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은 생산요소의 효율적 이동을 제약
 - (창조적 혁신의 둔화) 우리나라는 사회이동성이 저하되고 공교육 시스템이 약화되면서 창조적 혁신을 주도할 인적 역량이 쇠약하고 R&D의 실질적 성과도 선진국에 비해 부진하여 혁신이 둔화
 - (미약한 사회자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법제도, 사업환경 등이 취약하고 낮은 사회적 신뢰수준과 과도한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
- 왜 다시 경제성장인가?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것은 지역 간 성장격차 뿐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개선하여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임.
 - 따라서, 본 컨퍼런스는 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2) 창조적 혁신 제고, 3)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생산성 제고 개혁방안을 제안

[세션 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발표 1. 규제혁신 전략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

- 잘 설계된 규제는 생산성을 높여주지만, 잘못 설계되었거나 사회 변화에 뒤처져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
 - 규제는 경제주체가 소모적인 활동이 아닌 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을 투입하고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추구하도록 만들 수 있는 수단임.
 - 이와 달리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지연시키는 규제,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 소모적인 업무를 요하는 규제, 피규제자 간 차이를 무시하는 획일적인 규제는 생산성을 저해하므로 꾸준히 발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큼.
- 규제 개선이 더딘 이유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 규제기관의 타성 및 편의주의, 피규제자의 관심 부족 등 다양하며, 유형별로 다른 처방이 필요
 - 갈등이 첨예한 신기술·신산업 규제는 대통령실이 부처,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 조정을 주관·위임하여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개선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개시부터 규제 개선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필요
 - 기존 산업의 진입규제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지, 바람직한 대안이 없는지, 규제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해야 함
 - 규제가 촘촘할수록 한계효과는 작아지고 한계비용은 커진다는 점을 인식하여, 법정의무교육, 법정 인증 등 최적 수준보다 많은 규제는 총량을 제한함으로써 효율화하는 등 규제 목적의 달성뿐 아니라 수단의 비례성도 고려
 - 일률적 규제는 입안자 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규제자 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규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성과기반, 원칙기반, 관리기반 등 광의의 자율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함.

[세션 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발표 2. 노동시장 개혁

김민섭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재편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상황
 - 고용, 근로시간, 임금 측면에서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전환 및 고령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제약
 - 소수의 안정된 근로자와 다수의 불안정한 근로자로 구성된 이중구조는 생산성을 약화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저해
- 고용보호 조정,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중구조 완화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 **고용보호 조정**: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보호 격차를 완화하여,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유연성과 비정규직·중소기업·청년·중장년층 근로자의 안정성 확보
 -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로 노동생산성 향상, 여성·장년층 인력 활용, 노사 간 합의 가능성 마련
 - **임금체계 개편**: 임금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 개편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 고용보호, 근로시간, 임금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패키지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도출의 여지 모색
 - 새로운 고용계약부터 보호 수준 및 근로조건을 변경해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 제안

[세션 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발표 3. 노사관계 선진화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사 간 경직적 관계로 인한 잦은 파업, 임금체계의 합리적 변경 저해(고령화, 고임금화에 따른 고용 여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고,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노동 약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이중적 성격을 띠며
 - 대기업 및 공공부문으로 구성된 1차 노동시장에서는 과도한 노조 대표성 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2차 노동시장에서는 취약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 인적자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첫째, 대기업 내부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과반수 노조의 근로자 대표 제도를 개선해 청년, 고령자 등이 합리적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 대표 제도'를 도입
 - 둘째, 최근 ILO 핵심 협약 가입 등으로 신장된 노동권에 비례해 파업권 자제를 유인하되,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파업 시 대체인력의 활용 금지 및 사업장 점거 제한 등은 실효성 있게 제도 개선
 -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로감독 및 근로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원칙적으로 강화
- 다만, 법 제도상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부분적·단계적인 개선을 제안
 - 중요한 근로기준의 변경과 관련한 근로자대표의 선출, 역할 및 부분근로자 대표제의 도입 등을 근로기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 사례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파업 시, 파견근로자 활용을 제외한 부분적인 대체인력을 허용하는 방안과 사업장 점거 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초과근로 수당 지급 등 현실적으로 법적용이 어려운 조항들은 적용을 유보하거나 적용 전 유예기간을 둘 필요

[세션 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발표 4. 기업 지원 합리화

김민호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대규모 재정으로 기업을 지원해 왔으나 지난 15년간 성장 역동성이 하락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
 - 20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총 34.5조 원의 재정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이 무려 1,761개로 분절화되어 사업 운영비 대비 효과성이 낮을 우려 존재
 - 지난 20년간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정부 주도과 행정편의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 다수
- 기업 벨류업의 본질인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지원정책의 초점을 맞춰, 디지털 전환, 스케일업, 네트워크 확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
 - 디지털·AI 전환에 대응하여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개발하고, 기업의 기술도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원 방식으로 전환
 - 사업 운영을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민간 자본, 컨설팅,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개선
 -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 및 협회,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해 기업 수요에 맞춘 서비스, 정보,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
- 기업지원의 효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증거 기반의 성과 중심 기업 지원 정책으로 개편 필요
 -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 내역과 성과 정보를 공개하고, 분절화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사업을 통합, ‘원-인, 모어-아웃(One-in, More-out)’ 제도 시행
 - 지원 대상 선별에 AI를 활용하고, 신규 정책 시행 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공조직의 운영 방식을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전환

[세션 2] 창조적 혁신 제고

발표 1.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 강화

김희삼 GIST 교수

- 교육이 사회 이동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상태임.
 - 한국 사회에는 과열된 사교육 경쟁이 존재하며, 사교육 재화의 양과 질에 대한 접근성은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크게 의존
 - 한국의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보완하는 보완 교육의 의미에서 벗어나 있음.
 - 선행학습을 포함한 사교육에서 이미 발생한 격차를 완화하는 데 공교육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무력감이 교육 현장에 팽배해 있음.
- 교육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누적되고 더 벌어지며 인생의 궤도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조기 개입이 중요함.
 - 양질의 유아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유보통합과 유아교육의 무상화 추진, 돌봄과 교육의 결합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시기의 공교육 역할 제고, 환경의 영향력이 강한 영어 능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등학교 영어 출발점 교육의 강화, 다양한 잠재력의 발견을 돕는 특기적성교육의 확대 필요
 - 중학교 단계의 기초학력 보장 및 개별 학생 보살핌 강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교육자원의 활용 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장, 직업계고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공 사다리 다양화
 - 개인의 학업 의지와 능력이 확고함에도 가정환경 탓에 재능을 만개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전주기 장학금 확대

[세션 2] 창조적 혁신 제고

발표 2. 중등교육의 자율화

김이경 중앙대학교 대학원장

- 국가적 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 관점에서 중등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 충돌이나 획일적 시스템 적용 등의 문제로 학교 교육 혁신은 답보 상태
 - 상위 대학 입학에 위한 과도한 대입경쟁 과정에서 사교육 의존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나 21세기 역량 함양은 미흡
 - 노동시장에서 우수한 인재가 교직으로 진출하나 직무 동기와 효능감, 교직 만족도가 낮고 과도한 행정업무 수행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 증대 및 교육에 대한 열정 소진
 -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로 인해 단위학교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이 부족하고 교장임용제도의 한계로 학생 교육 혁신과 변화를 향한 활력이 미약함.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제한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학교 및 학생의 성취 등 개선에 필요한 교육성과를 판단할 정보의 부재
 - 교육 자치권을 지녔지만 교육 책무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지방교육당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시스템 및 교육감 선거제도
- 중등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 중심, 정부 주도 교육개혁의 폐해를 극복하고 학교에 자율성을 주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교육개혁 필요
 - 대학에 자율성 부여 및 서술·논술형 형식으로서의 대학 입시제도 개선,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 전면 시행, 교육감 선거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및 시·도교육감의 재정적 책무성 강화 등의 방안을 제안

[세션 2] 창조적 혁신 제고

발표 3. R&D 효율화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술혁신 강국으로 GDP 대비 국가 R&D 투자와 R&D 인력 등 투입 측면에서 세계 수위 수준
- 이러한 투입에 걸맞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과학적 성과(논문 등)와 기술적 성과(특허 등) 모두에서 글로벌 상위권 성과를 내고 있음.
 - 다만, 이러한 과학적, 기술적 성과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정부 R&D의 기획, 집행, 배분 방식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
 - 부처별로 파편화된 R&D 사업, 대학의 자금부족과 정부 출연(연)의 역할 문제, 낡은 조세지원제도, 출연금 중심의 중소기업 R&D 배분 등이 구조적 문제의 주요 원인
- R&D 투자가 양질의 경제적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R&D 정책을 모색할 필요
 - 경직적인 국가 R&D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창의적인 R&D를 주도 하고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시장 수요에 맞는 R&D가 기획될 수 있도록 새로운 R&D 투자수단(가칭 한국형 테마섹, R&D PPP)을 도입
 - 개방형 혁신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약화된 대학재정을 정상화하고, 출연(연)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
 - 아울러, 출연금 일변도의 중소기업 R&D를 기술보증기반 융자·후불·투자형 R&D 등 정책혼합 방식으로 혁신

[세션 3]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

발표 1. 지역균형 발전방안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중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역균형 제도는 국가적으로 전면 추진하기보다는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한 후 지역 간 경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경쟁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일정 수준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
- **[과거 정책 평가] 지방분권 정책은 중앙정부가 매우 제한적으로 지방에 권한을 이양했으며 이후에도 승인 절차를 시행하는 등의 통제를 유지**
 - 균형발전 정책은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방 대도시의 중심 (hub) 기능이 약화돼 수도권 집중이 심화
- **[정책과제] 행정체계 개편, 세입분권, 세출분권, 행정분권 4가지 정책방향을 제안**
 - (행정체계 개편)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고 지역별 허브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 인구 500만~1,000만 명의 강소국¹⁾ 단위를 형성
 - (세입분권) 중앙-지방 간 차등공동법인세를 도입하고 전국을 발전, 중간, 낙후 지역으로 구분해 낙후지역일수록 지방분 법인세의 비중을 상향
 - (세출분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부처별로 2~3개 포괄보조금으로 통합 하고, 지방공모사업은 중앙정부가 광역단체에 재원과 기초선정 권한을 위임한 후 광역단체를 평가
 - (행정분권) 핵심 행정권한인 토지구제권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고 용도지역 지정과 농지구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
- **[추진전략] 모든 지역에 분권을 동시에 적용하기보다는 지역 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중앙정부는 지역 평가를 통해 자율권의 부여와 회수를 결정**

1)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에 따르면 최상위 4개국(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의 평균인구는 645만 명임.

[세션 3]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

발표 2. 대기업규율 합리화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재벌) 규율은 사익편취 행위 근절에 무게를 두고 있음.
 - 경제 정의 실현, 경제력 집중 방지, 시장경쟁 촉진, 투자자 보호 등의 목표가 있으나, 직접적·구체적 목표는 ① 부실 전염 방지와 ② 사익편취 행위 근절
 - 계열사 간 부실 전염 및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화 문제가 어느 정도 통제되는 가운데, 최근의 관심은 사익편취 행위 근절에 모인 상황
- 장기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 규율은 기업 내외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기업의 경영 판단은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규율도 이사, 소액주주, 유가증권시장, 기관투자자, M&A 시장 등 기업 내외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증권 관련 집단소송 실효성 제고, 경영권 방어 수단의 재조정, 공시제도의 효과성 개선, 기관투자자 견제 기능 확보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
- 자율적인 규율 기능이 성숙할 때까지 가동될 공적 규율은 ① 민간의 자율 규율 역량을 제고하고 ② 향후 개입 정도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정비
 - 사후규제는 사안별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를 교육하는 효과가 있고, 규제 범위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자연인의 잘못을 기업이 대신하지 않도록 자연인과 기업 간 규제 부담을 재조정하고 자연인 처벌을 강화해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규율 참여 유인을 제공

[세션 3]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

발표 3. 기업 간 거래 선진화

이진국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공정한 가치 교환을 통한 합리적 부가가치 배분은 장·단기적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국내 하도급 거래는 거래 의존도 심화와 홀드업 문제²⁾로 인한 협상력 격차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노출
 - 소규모 수급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수의계약 방식이 과도하게 활용되는 동시에,
 - 분쟁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활용도조차 원사업자의 기존 양식 고수, 계약서 내용과 현실의 괴리, 인지 부족 등의 이유로 낮은 경향
 - 생산요소 가격 인상으로 하도급 대금 인상을 경험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수급사업자일수록 그 비율이 낮아 요소 가격이 대금에 원활히 반영되지 않음을 시사

- 이에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안
 - 매출액 상위 기업뿐만 아니라 중상위·중위 기업도 원사업자로 포함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를 조사해 을병 간 실태까지 포괄할 수 있는 확장된 하도급 실태조사를 수행할 필요
 - 표준계약서를 '준거 기준을 포함한 필수 조항'과 '업종·거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한 선택 조항'으로 구성하고, 간소화 버전을 함께 제공해 활용성을 제고
 - 하도급법에서 '정당한 사유'의 범주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 명확한 이해를 유도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할 필요

2) 특정한 관계를 고려해 거래한 경우, 그 거래가 인질이 되어 오히려 당사자의 입지를 약하게 만드는 문제 또는 상황